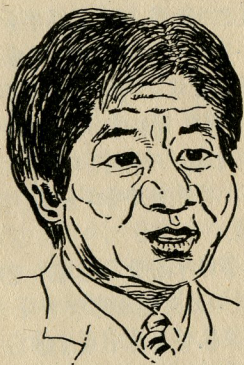


컬럼

두려운 것은 패배가 아니라 패배주의이다

노무현 / 국회 의원



브탁받은 원고를 쓸 때면, 더욱이 고정 컬럼으로 다 달이 내보내야 하는 글을 앞에 두고서는 그동안 쌓였던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사건과 사건이 꼬리를 물고 위선과 진실이 뒤범벅되어 세상 만사가 어찌 돌아가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데에도 까닭이 있겠지만 또 다른 까닭의 하나는 엄중한 시국이 주는 건지기 힘든 압박과 그에 따른 무력감 때문이다. 도대체 이러한 무력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정치가 들어설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힘의 논리로부터 주어진다.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독재 정권의 폭력은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힘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장으로,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정치의 복귀할 수 있었다. 권력의 참주인인 국민 대중이, 공권력 아닌 사권력으로 전락한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단호한 응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채 일 년도 되기 전에 국회는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방치하고 권위조차 상실했으며 정권은 이른바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중간 평가’를 이용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문목사 방북’을 이용해 ‘빨갱이 때려잡기’ 소동을 벌이며 ‘동의대 사태’를 일체의 반정부 활동을 말살시키는 데에 심분 이용하고 있다. 4·13때 호헌 지지를 하고 나선 세력들이 폭력 척결의 플래카드를 내걸며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백색 테러의 전과자까지 망라된 이들 집단에게 재벌들은 30억 원의 자금을 선뜻 지원하고 나섰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힘으로 밀고 나오는 권력과 과연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공권력 개입의 중지 요구와 합리적 해결책의 제시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가. 민주화의 일정이 중단된 채 5공 시절의 그 인물들이 자신의 권력을 놓고 있지 않은 지금 도대체 무슨 협상이 가능하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인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까닭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무시와 자의적 집행이다. 우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떻게 짓밟히고 거부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동서와 남북을 막론하고 세계의 노동자들이 5월 1일 노동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이 땅에선 도합 5천명이 넘는 노동자와 학생이 연행당했고, 합법적 절차를 밟은 후 평화적 집회를 열겠다는 주최 단체의 거듭된 천명과 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념 집회는 힘으로 봉쇄되었던 것이다.

국회가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범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군 수사 기관까지 참가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불법 연행, 강제 해산, 무더기 구속 등을 자행하고 있다. ‘동의대 사태’를 전후해 시위대의 폭력만이 거론될 뿐 지난 번 울산 사태 때도 확인되는 주민에 대한 백골단의 무차별 폭행과 노동 현장의 구사대 폭력은 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기립 박수를 받으며 세계인에게 약속했던 7·7선언도 폐기한 채 70 고령의 노인에게,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에게 ‘지령에 의한 잠입·탈출죄’를 어저지로 두드려 맞추면서, 파렴치한 행위로 구속된 전두환 씨의 사촌형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는 전씨의 처남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될 때 76명이나 되는 동의대 농성 학생들은 엄청난 죄목이 붙여져 구속되었다. 사건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야당 총재를 부르는 저들이 왜 전두환 씨와 그 공범자의 수사에는 벽을 쌓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여론의 왜곡이다. 나는 ‘동의대 사태’에 대한 중앙 일간지의 사설을 보며 엄청난 왜곡과 과장을 역겹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재단의 비리가 문제시되었을 때 문교부에서 충분히 조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동원해 무모하게 진압한 점에 대해선 일언 반구 언급도 없고, 심지어 감금된 전경을 태워죽인 것인 양 써 놓은 자자들까지 있었다. 그 이후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말을 바꾸는 이들에게 과연 지식인으로서의 양식이 있는가조차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의 왜곡과 진실 보도에 대한 외면이 노동 쟁의에 대해선 더더욱 극심하다는 것을 국회 노동위에 들어와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힘의 논리와 정치의 파행, 법과 상식의 무시, 위선과 심술에 가득한 사이버 여론을 지켜 보며 어디서부터 뚫고 나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이것이 정치 부재의 제도권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자 무력감에 빠진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 중립화,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권력의 수족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노력마저 사라졌다고 믿지는 않는다. 성과는 적고 진척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지지하고 또한 요구하지 않는가. 정당하고 의로운 권력을 세우기 위해 싸워 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말이다. 우리의 길이 승리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패배주의이듯이 나 역시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벗어나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온 오리란 것 또한 나는 믿는다.